

Section II

정책논단

세대전쟁,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¹⁾

박 종 훈

1. 일본의 세대전쟁이 남긴 상처

일본에서는 최근 ‘깨달음을 얻은 청년들’이라는 뜻의 ‘사토리(さとり) 세대’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사토리 세대는 2009년에 출판된 책 『탐을 내지 않는 젊은이들(欲しがらない若者たち)』⁽²⁾에서 마치 득도(得道)라도 한 것처럼 소비 욕망을 억제하고 사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 말인데, 그 뒤 일본 언론들이 사토리 세대를 일본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지목하면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 세대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자동차나 음주, 여행에도 소극적이고 심지어 연애에도 무관심해서 대부분 혼자 보내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다.

사토리 세대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보다 낮은 소득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꿀 의욕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민간급여실태 통계조사’에 따르면 30~34세까지의 평균 연봉은 1997년에 449만 엔(약 4,500만 원)이었지만 13년 뒤인 2010년에는 오히려 384만 엔(약 3,900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1990년 이후 경기불황이 시작되자, 당장 이윤을 회복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정규직 직원 채용을 기피하고 단기 계약직 고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이 신규 인력 채용까지 기피하자 1990년에 3.1%였던 청년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에 9.1%까지 치솟았다.

이 사토리 세대의 등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일본 기업들이었

(1) 이 글은 『2015년 빗더미가 몰려온다』(21세기북스, 박종훈, 2012)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2) “さとり世代、浸透中 車乗らない、恋愛は淡泊… 若者気質、ネットが造語”, 朝日新聞, 2013년 3월 18일.

다. 세속적인 물욕(物慾)을 모두 내려놓은 사토리 세대가 소비를 크게 줄이는 바람에 일본의 내수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동차 운전을 기피하는 바람에, 2007년 현재 일본인들의 자동차 소유 비율은 7년 전보다 10%나 줄어들었다. 심지어 사토리 세대는 한때 대학생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운전면허조차 잘 따지 않아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는 캠페인성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은 일본 청년들은 해외여행마저 기피하여, 2000년에 417만 명이었던 20대 해외여행자 수가 2012년에는 294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 세대전쟁의 격전장, 부동산

실업과 비정규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이제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9세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2012년 3분기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2.7% 오르는 데 그친 반면 40대가 세대주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4%나 올랐고, 50대가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뛰어올라 8.4%나 높아졌다. 심지어 60대의 소득조차 6.9%나 올라 20~30대의 소득증가율을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소득증가율이 낮아진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대상은 바로 부동산이다. 기성세대에게 부동산이 자산 축적과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것과 달리 지금의 부동산은 오히려 청년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에코붐 세대의 핵심인 30대 젊은 층의 평균 세전소득(稅前所得)은 3052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의 평균 집값은 3.3m²(1평)에 1642만 원이므로,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m²(25.7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평균 4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는 평균 소득을 버는 30대가 자신의 월급의 3분의 1을 저축해도 42년을 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지금의 집값은 사실상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뛰어오른 셈이다.

반면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30대나 40대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 자신들의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쏟아 부은 탓에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의 평균자산은 3억 9600만 원이지만 그중 6900만 원이 빚이기 때문에 순자산은 3억 2700만 원이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3억 200만 원이다. 즉,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에서 부동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2%에 이르는 것이다.⁽³⁾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이 자신의 모든 자산을 부동산으로 바꾸어놓는 바람에, 당장 꺼내서 쓸 수 있는 금융 자산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제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은퇴를 앞둔 세대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내몰리더라도 집을 팔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특히 2013년에 나온 ‘8.28 전월세 대책’은 이름만 전월세 대책이었을 뿐 사실상 기존 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더 강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부양책보다 부동산을 사려는 실질적인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 젊은 세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그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진 상태에서 이처럼 단기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시장의 왜곡만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의 버블 붕괴와 비슷한 시기인 1990년 집값 폭락으로 큰 위기를 맞았던 스웨덴의 선택은 부동산 부양책에 매달린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다. 1980년대 스웨덴 정부가 공격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쓴 결과, 1984년 이후 단 6년 만에 집값이 62.8%나 뛰어 오르고 가계대출은 2배가 넘게 늘어났다.⁽⁴⁾ 그런데 때마침 독일 통일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스웨덴의 부동산 거품은 한순간에 꺼지고 말았다. 스웨덴 7대 은행의 손실 규모는 GDP의 12%에 이를 만큼 불어났고 1992년 8월 연 13%였던 시장금리는 한 달 만에 연 82%로 급등하는 등 스웨덴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 스웨덴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금융위기를 불러온 은행의 대주주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었다.

스웨덴은 것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결코 젊은 세대를 위한 실업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각종 복지제도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복지 지출을 크게 줄였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더

(3) 박해식·임진(2013):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소득·자산 구조와 시사점”, 『금융 VIP 시리즈』, 한국금융연구원, 6, 1-42.

(4) 이장영·박동순(2007):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한국재무학회 보고서.

육 강화하였다.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되던 1991년, 스웨덴은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보편적인 무상보육 체계를 확립했다.⁽⁵⁾ 그 결과 현재 스웨덴의 공립보육 시설의 비중은 75%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의 5.2%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열네 배가 넘는다. 더구나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우리 돈으로 18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했다. 이 같은 각종 출산지원 대책에 힘입어 1999년 1.5명까지 떨어졌던 스웨덴의 출산율은 2010년 1.98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적극적인 미래세대 투자에 힘입어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5.3%까지 떨어졌지만 이듬해인 2010년 5.3%로 회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빠른 경제회복세 덕분에 스웨덴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집값이 오른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정작 부동산 부양책에만 매달렸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3. 세대 간 복지 불평등, 어떻게 풀 것인가?

2013년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세대 간 회계’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결과 2008년 현재 8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돈의 10.8배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젊을수록 그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60세는 자신이 낸 돈의 3.6배를 받아가고 40세는 2.2배, 18세는 2.0배로 떨어진다. 즉, 납부자의 나이에 따라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큰 것이다.

이를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8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평균 47.9%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은행 예금금리가 2%대 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47.9%는 놀라운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평생 수익률이 24%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국의 80대는 그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6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16.8%로 떨어지고 40세는 8.2%, 18세는 6.5%로 추락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지금의 젊은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나이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조건이 한국처럼 이렇

(5) Svenska Dagbladet: “Sverige bäst i världen påbarn”, December 11, 2008.

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금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현 세대에 게만 너무나 유리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를 2060년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기성세대가 자신의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있는 지금과 달리 미래세대는 그보다 무려 2.5배나 많은 23%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앞으로 급증하게 될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노령화가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다. 이들 고령층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이 끝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재정은 소득이 있는 젊은 세대가 거의 감당하게 될 텐데, 출산율 감소로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청년 한 명이 감당해야 할 노인복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를 지금처럼 소득의 5.89%로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최대 94조 원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이런 적자를 막으려면 2060년까지 건강보험료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소득의 1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⁶⁾

여기에 2014년 도입될 기초연금 부담까지 더한다면 2060년 우리의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의 최소 40%를 노인들 복지를 위해 써야 하는 처지가 된다. 더구나 이런 계산이 1.42명이라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가정한 것인 만큼 그 시기는 2060년이 아니라 2040년대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우리의 청년 세대는 앞으로 엄청난 노인복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한 복지혜택은 무려 85만 원이나 됐지만, 6~19세까지 복지 혜택은 고작 2만 원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미래에 기성세대를 위한 복지 부담에 짓눌린 미래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하며 저항 하든지, 아니면 일본 젊은이들처럼 아예 꿈을 잃은 청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6)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2월 25일.

4. 세대전쟁의 여파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한국에서 세대전쟁의 여파는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정책의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한국 경제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투자까지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나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 합계출산율이 계속 1.19명 수준에 머물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30년대에 1.6%로 낮아지고 2040년대에는 0.74%로 추락해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경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⁷⁾

세대전쟁의 또 다른 여파는 바로 자산 가격의 끝없는 추락이다. 젊은 세대의 감소로 내수시장이 축소된 경제구조에서는 기업의 이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젊은 세대가 주식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매수주체가 줄어들어 주가하락의 한 원인이 될 것이고, 주가가 계속 오르던 과거에 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일도 훨씬 어려워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2015년 이후에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집값 하락 압력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 세대전쟁을 넘어설 정책적 대안

지금 한국 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세대전쟁을 끝내고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처절한 전쟁을 계속하다 모두 함께 몰락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국 경제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세대 갈등이 세대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대전쟁을 넘어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무엇일까?

(7) 문형표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한국개발연구원, 2006년 12월.

우선 가장 먼저 공공보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무상보육은 결국 보육료 인상으로 끝나게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무상보육 시스템보다 국공립 유치원을 통한 공공보육 시스템을 통해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도입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동시에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아동수당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18세나 25세까지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업부조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OECD 국가들 중에 실업부조가 아예 없는 나라는 한국 등 몇몇 나라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한 공공 주거 정책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동과 청년, 그리고 가족을 위한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사회로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투자임을 유념해야 한다.

KBS 경제전문 기자

서울특별시 150-7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전화: (02) 781 4521

Email: jonghoon@kbs.co.kr

